

세금으로 산불 성금 내놓고 생색...광주시의회 ‘몰염치’

영남 산불피해 복구성금 5백만원 중
의회 운영공동경비서 180만원 지출
시민 신뢰 저하 “도덕적 해이” 비판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 28일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영남 산불 피해 복구 성금’ 500만원 중 180만원이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동경비에서 지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시의회는 당시 “의장단과 23명 전 의원,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홍보했지만, 공금을 섞어 목표액을 맞춘 내역은 알리지 않았다. 규정상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시민 신뢰를 소홀히 한 전형적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3월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명목으로 대한적십자사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의원·간부 개인 성금 320만원에 예산 180만원을 더해 조성됐다.

예산은 의장 20만원, 부의장 2명 각 15만원, 사무처장 30만원 등 업무추진비 80만원과 의정활동 지

원을 위한 운영공동경비 100만원으로 구성됐다. 그룹에도 시의회 보도자료에는 ‘전원 자발 참여’만 강조됐고 예산 투입 사실은 빠졌다. 결과적으로 시민 들에겐 ‘전액 자출 모금’처럼 비친 것이다.

당장 진보당 광주시당은 “예산을 쓰고도 숨긴 채 자발적 모금으로 포장했다면 기부금 부풀리기”라며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지방의회 신뢰가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행안부 규칙에 따라 관할 밖 재난의 이재민·피해자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어 집행은 적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합법성과 타당성은 다르다는 것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지적이다. 특히 재난 구호 성금은 선의와 투명성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세금이 한 톨이라도 들어간다면 목적·근거·항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개인 기부와 기관 재정을 명확히 구분해 시민이 판단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목표액을 먼저 정해 공금으로 메우고, 이 사실을 뒤에야 공개하는 방식은 ‘가능하니 했다’는 자기 합리화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위법·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관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가 시민 신뢰의 시험대에 오른 건 이번만 이 아니다.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퇴장시킨 뒤 비공개 ‘쪽지투표’를 하고도 대외적으로는 ‘합의 추대’라고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 ‘밀실·담합 투표’ 논란이 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논란이 확산되자 예정특위 위원 9명 전원이 사퇴했다. 이후 당 윤리심판원은 해당 의원 10명에 대한 소명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중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성금 500만원 중 320만원은 의원·간부가 자발적으로 냈고, 180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과 운영공동경비 규정에 따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십자사를 통한 공익성금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금 조성 내역 고지가 충분치 못했다. 앞으로 공적 재정이 쓰이는 모든 집행은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군공항 이전·달빛철도 예타면제 지연...조속한 추진 촉구

지역 미래와 직결된 핵심과제 강조

광주시는 대통령실 주관 6자 테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회의를 열지 못한 군공항 이전 문제와 달빛철도(광주-대구 고속철도) 예타면제 논의 지연 상황을 언급하며 조속한 논의 개시와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이제 는 TF의 중간 결론이 필요하다”며 “공식 회의가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군은 지난 7월 군공항 이전 방식의 ‘공개 공모 전환’을 요구한 데 이어, 9월에는 ‘3대 조건’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협상 구조가 달라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강 시장은 “무안군민 다수가 민간공항을 포함

한 통합공항 건설에 공감하고 있다”며 “광주시도 통합공항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간공항 이전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3년 전남도와 합의한 군·민간 통합공항 원칙을 존중한다”며 “구체적 시점은 TF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재개와 지역 접근성 문제 해소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예타면제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대구·광주 지자체와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초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긍정적 의견이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뿐 아니라 남원·곡성·함양 등 중간 도시를 연결하는 균형발전 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 중심의 판단만으로는 새로운 교통

망의 의미를 담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적 소통의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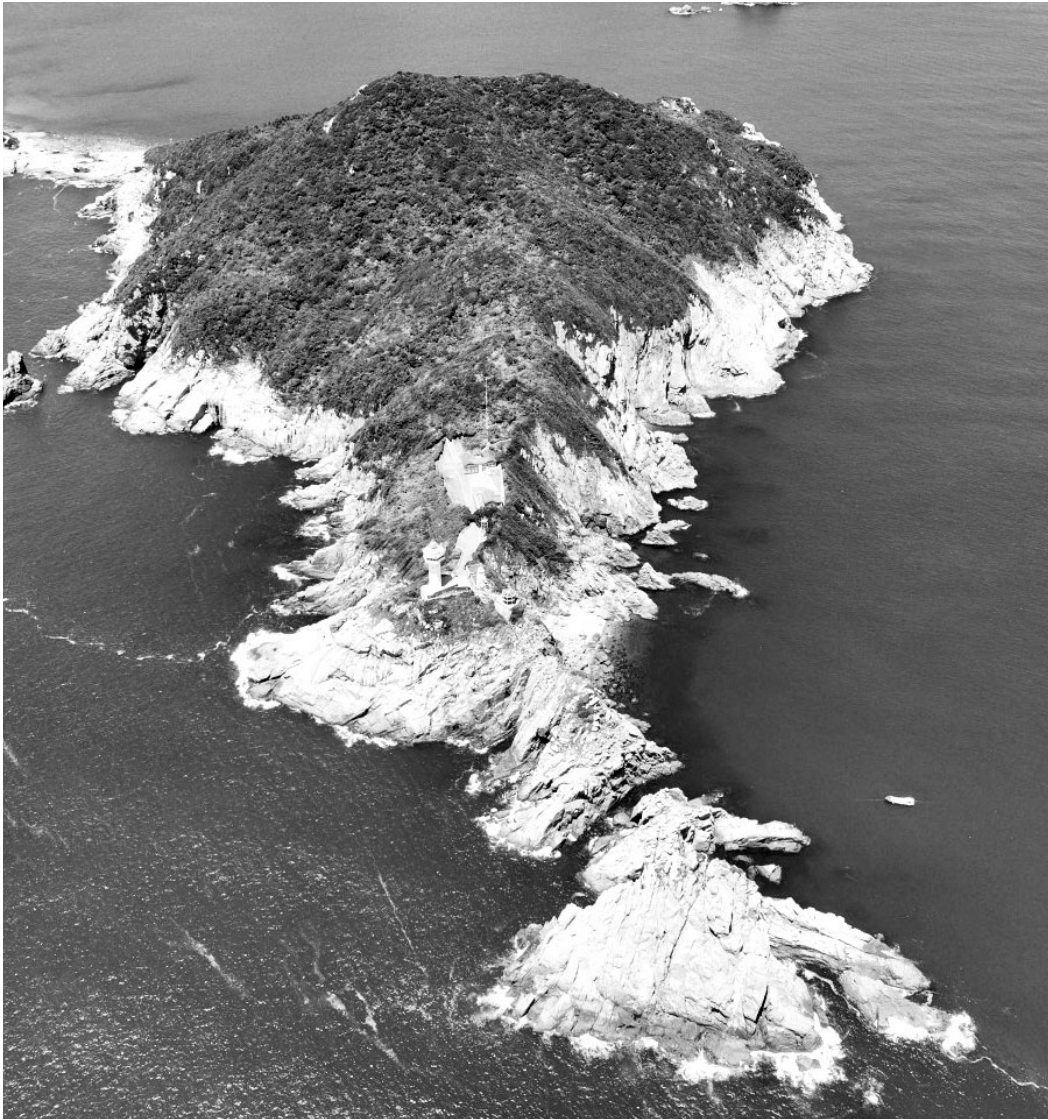
광주시는 홍수와 폭우에 대비한 도시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천 대심도 정비와 함께 양동북 개시장 철거, 영산강 준설, 대규모 저류조 설치 등으로 근본적인 홍수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 사업들은 정부 자원과 연계된 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달빛철도, 홍수 대응 모두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강 시장은 “통합공항의 추진 방향이 조속히 마련되고, 달빛철도의 예타면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며 “홍수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도시 기반도 함께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동백꽃 명소’ 여수 거문도 수월산 국가유산청은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각각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은 동백이 필 때 특히 많이 찾는 명소다.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지반침하도 사회재난...군중안전 대책 구체화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새로 규정했다. 10월 2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관리체계가 가동되며 지자체의 다중운집 실태조사가 매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도로와 건설 현장 등에서 반복된 지반침하 사고를 국가 차원의 관리대상에 편입해 소관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 등 관계기관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복구 절차가 더 신속·체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한 것도 변화다.

다만 원인이 특정 지하시설물로 명확할 때는 해당 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는다. 하수도 파손이 원인이면 환경부, 가스 공급시설 문제가 원인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하도록 했다.

군중안전 대책도 구체화됐다. 지자체장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5만명 이상 철도역사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에게 행사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도 촘촘해진다.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지원실시기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해 응급복구와 구호, 금융·보험 서비스를 일원화해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시행으로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고, 사고 시 컨트롤타워와 자원라인이 동시에 가동되는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국기능경기대회 20일 광주서 개막...1만3000명 집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1만 3000여명의 기능인이 광주에서 각종 기량을 겨룬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20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51개 직종 기량을 겨루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

경기는 전통 직종인 폴리메카닉스, 전기제어, 용접, 헤어디자인 등 48개 분야와 함께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모바일앱개발 등 미래기술 관련 3개 시범 직종까지 포함된다.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1~2위 선수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후보 자격을 얻는다.

광주는 지역 특화 기술력을 선보일 인재들의 활약에 기대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37개 직종에 105명의 선수가 출전해 소프트웨어·자동화설비 마이스터고 등 특성과 학교와 함께 훈련한 실력을 선보인다.

개회식은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대회 기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명장 작품 전시, 네일아트·도자기 체험, 첨단 로봇기술 체험 등이 운영된다.

응원 메시지 트리와 기능경기대회 히스토리월도 설치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운영에는 지역 대학생과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하는 200여명의 자원봉사단이 참여해 안내와 주차, 환경정화 등을 맡는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며 총 169억원이 투입돼 경기장 시설 개선과 운영 지원에 활용된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대회는 전국의 젊은 기능인들이 광주에서 기량을 겨루며 세계 무대로 나아가 갈 발판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기술인의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09월 04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동년 09월 15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농협회사법인 유한회사 백장농원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89

청산인 김 중 태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법인은 2025년 1월 22일자 이사회(서면)결의(2025월 7월 17일 주무관청 승인)에 의하여 해산 결의되었으므로 본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본 법인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재단법인 명량대참기념사업회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36

청산인 김 영 록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1985-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